



### 노동부 홈페이지에 석면 정보 배너 오픈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석면의 유해성 및 주요 제품 등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해 진다.

노동부는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www.molab.go.kr) '원클릭 가이드' 내에 '석면관리' 배너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 배너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우선,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축자재, 석면포 등 방직 제품, 석면 브레이크라이닝 및 개스킷 등의 품목별 종류, 석면함유량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석면 건축자재는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알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석면 함유 여부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뿜칠, 지붕재, 천장재 등 대상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작업별 특성이 반영된 작업지침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석면의 유해성, 선진국의 석면정책, 국내 석면관련 제도, 직업병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병욱 팀장은 "2003년 7월 석면해체·제거 허가제도 도입이후 허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무허가 작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배너 구축을 통해 "석면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석면 해체·제거 허가 신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방직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건강진단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발견 한다

앞으로 유해물질 취급근로자는 건강검진시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취급 유해물질의 건강장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건강장해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나타난 부실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사 및 산업의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단기적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였다. 현재는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검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CT 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하였다.

셋째, 의사는 건강검진시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법·부당한 검진결과에 대하여는 위반



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하는 등 처벌기준을 세분화 하였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되고, 검진기관의 업무 정지 상한선이 새로이 마련된다.

중·장기적 개선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직접 검진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검진의 사가 소신있게 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진 의사가 부적절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이 제한된다. 부실검진시 검진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검진기관 만이 처벌을 받고 있다. 내실 있는 검진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 및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 조선업계, 안전관리 수준 높아졌다

노사 자율적 안전관리가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 48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3.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산재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안전보건 교육실태 △안전보건 투자비용 △현장 안전보건조치 실태 등 5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총점의 90% 이상 취득)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 보통업체

(70%~90%미만)는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 불량업체(70%미만)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관리 할 계획이다.

#### ※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관리등급 현황

구분	계	평균점수	자율관리	중점관리	특별관리
'07년도	48개소	779.6	7개소	37개소	4개소
'06년도	42개소	751.3	5개소	32개소	5개소
증감	+6	+28.3	+2	+5	-1

- '07년도 평가결과 특별관리 대상 4개소는 신규사업장임

#### ※ 자율관리 대상 업체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STX조선(주), 한진중공업(주) 부산공장 등 7개소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조선업은 타 업종에 비해 유해·위험요소가 많아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약 2.5배가 높아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자율 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 1위 조선국의 위상에 맞도록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서부지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서울서부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TCE, 톨루엔, 노말hexan, 벤젠, 복

합유기용제, 용접흡, 포름알데히드 등 직업병 주요 유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8개소이며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관리, 화학물질 취급공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서울서부지청은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지시 조치, 과태료 부과 등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전기술지도와 병행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 종합적인 시설개선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서울강남지청,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 수거 검정을 위한 불시점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관내(강남구, 서초구) 소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 수입, 유통(판매),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제조, 판매, 사용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취급중인 모든 제품의 최대 20%, 최소 2개 모델 이상의 제품을 수거하며 안전모는 6개 이상을 수거하는 등 모델별로 주요 성능시험에 필요한 최소 갯수 이상을 설비로 지급하고 수거하였다.

수거하여 검정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즉시 제조·사용 중지를 명하고 합격취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미 검정품에 대해서는 즉시 제조·사용중지를 명하고 수거·파기하게 됨과 아

울리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법조치를 하였다.

### 대구북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산업 안전보건지도·점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2006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2006년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건수는 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건이 증가(23.5% 증가)하였고, 이 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발생(82%)한 점에 착안,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장 12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동종재해 재발방지 조치, 추락, 협착 등 5대 반복형 재해 발생요인 예방조치,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이들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프레스 등의 위험기계·기구나 DMF 등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현장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재해예방을 함께 하는데 있었다.

### 서울동부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내 및 지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 송영

기)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 환인제약(주) 등 800여개소에 설치·운영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청은 이번 관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에 대한 서울동부지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내 및 지도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노·사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07. 4.27(금) 금정역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된 국철 1호선 군포역, 금정역, 명학역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07:30~08:30 까지 1시간 동안 다발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국노총 및 안양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지역 안전·보건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양지청 관내 산업재해감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가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2006년 안양지청 관내의 재해건수는 총 1,879건

이었고, 이중 50인 미만 재해는 1,339(71.2%)이었다

#### 서울북부지청, 5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관내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설현장 권역별 노·사 자율안전체제 구축 및 산재예방활동 지원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김석철) 및 현장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주)건설부문 답십리재개발아파트 현장에서 5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현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 및 점검에서 서울북부지청장(김석철)은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함과 동시에,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중 노동관련 합의사항과 피해근로자 지원 대책 및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금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삼성물산(주) 현장관계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장 및 근로자들도 동참하게 하여 참석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